

# 윤석열 “국민이 원하는 개혁 과감히 실현”

###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 패스트트랙·조국 수사 대립 윤 “한겨레 사과하면 고소 재고” KBS-檢 유착 의혹 등 난타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 4일째가 되는 17일 국감에서 여야의 ‘조국 공방’이 다시 격화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 법제사법위 대검찰청 국감에서 여야는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정부위 국감에서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 참석을 계기로 조 전 장관 자녀의 서울대 인턴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재연됐다. 또 한국방송공사(KBS)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인터넷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회는 이날 법사위, 정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별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 조 전 장관 일가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등 수뇌부가 참석한 법사위의 대검 국감에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쏠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수사 과정의 피의 사실 유출과 과잉 수사를 문제 삼으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와 무관하게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검찰에 요구했다.

윤 총장은 국감 모두발언에서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목적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



윤석열 검찰총장(왼쪽)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강남일 차장검사. /연합뉴스

을 충실히 받들고,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를 놓고도 대립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소환 불응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와 무관하게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검찰에 요구했다.

윤 총장은 국감 모두발언에서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목적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

을 충실히 받들고,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를 놓고도 대립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소환 불응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와 무관하게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검찰에 요구했다.

윤 총장은 국감 모두발언에서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목적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

을 충실히 받들고,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를 놓고도 대립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소환 불응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와 무관하게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검찰에 요구했다.

윤 총장은 국감 모두발언에서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목적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

# 민주 지도부 “검찰개혁 매진”

### 조국 장관 사퇴 내부 비판 등 분열 차단

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당내에서 확산 조짐을 보이는 자성·쇄신 목소리에 지도부는 ‘분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수습에 나서고 있다.

정성호 의원이 페이스북에 “책임은 통감하는 자가 단 일명도 없다”며 자유한국당은 물론 민주당까지 여야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등 당내에서는 ‘여당으로서 최근의 국론 분열 사태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당 지도부는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며, 당내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자중지란’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 수습에 주력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부의 비판을 하는 분들조차도 우리가 분열하는 것, 말하자면 ‘자중지란’을 일으키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지율에 대해서는 “저희

가 검찰개혁을 능력이 있게 해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핵심적인 개혁 내용을 관철해나간다면 개혁 지지층이 다시 결속하고 (한국당과의) 지지율 격차는 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날 김해영 최고위원이 지도부로서는 첫 사과 메시지를 낸 것 이외에 민주당 지도부는 조 전 장관에서 비롯된 국론 분열 사태 등에 대해 추가로 유감 표명을 할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당내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당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거나 인적 쇄신 등을 단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에는 과거 중대 고비마다 분열로 고난을 겪은 ‘트라우마’가 짙게 깔려 있어 더는 공개적인 자성이나 비판의 목소리는 나오기를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문 대통령 지지율 45.5%

### 리얼미터 조사... 민주당 39.4%·한국당 34%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주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해 40%대 중반으로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4~16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10월 3주 차 주중 잠정집계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 주간집계보다 4.1%포인트 오른 45.5%(매우 잘함 28.8%, 잘하는 편 16.7%)로 나타났다.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4.5%포인트 내린 51.6%(매우 잘못함 42.5%, 잘못하는 편 9.1%)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4%포인트 오른 2.9%였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4.1%포인트 오른 39.4%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과 마찬가지로 2주간의 하락세를 마감하고 반등했다. 자유한국당은 0.4%포인트 내린 34.0%로 2주간 이어진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격차는 5.4%로 다시 오차범위(±2.5%포인트) 밖으로 벌어졌다. 바른미래당은 0.9%포인트 내린 5.4%, 정의당은 0.7%포인트 내린 4.9%, 우리공화당은 0.1%포인트 오른 1.6%, 민주평화당은 0.1%포인트 내린 1.6%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4.1%포인트 오른 39.4%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과 마찬가지로 2주간의 하락세를 마감하고 반등했다. 자유한국당은 0.4%포인트 내린 34.0%로 2주간 이어진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격차는 5.4%로 다시 오차범위(±2.5%포인트) 밖으로 벌어졌다. 바른미래당은 0.9%포인트 내린 5.4%, 정의당은 0.7%포인트 내린 4.9%, 우리공화당은 0.1%포인트 오른 1.6%, 민주평화당은 0.1%포인트 내린 1.6%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 민주 “공수처는 국민 명령” vs 한국당 “독재의 끝”

### 여야, 검찰개혁 여론전

‘포스트 조국 정국’의 핵심 화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놓고 여야가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7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민주적 통제 범위로 되돌리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한국당은 절대로 거역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국당이 (공수처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라 법사위의 체계·기구 심사를 위한 별도 기간(90일)이 불필요하며 이달 29일부터 본회의 상정과 표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다는 여야 4당(한국당 제외)의 패스트트랙 합의와는 달리 이날 말 ‘선(先) 검찰개혁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10월 말에 처리하겠다는 의사는 아니

다”라고 말해 선거법에 앞선 검찰개혁법 처리에 호응하지 않는 군소 야당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게슈타포(과거 독일 나치 정권의 비밀 국가경찰)인 공수처를 만들어 친문 독재의 끝을 보여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이 정권의 비리와 부패는 영원히 묻힌다. 친문(친문재인) 무죄·반문(반문재인) 유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옥상옥(屋上屋)인 공수처가 현 정권의 비리를 덮고 야당 탄압에 활용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한국당의 시각이다. 한국당은 ‘조국 사퇴’의 목표를 달성한 여세를 몰아 ‘조국 사태’의 책임론을 부각하며 대외 공세를 고삐를 더욱 바짝 조이는 모습이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정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된다면 공수처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자유한국당에 힘을 실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공수처 자체에 계속 반대할 경우 이번 주 초(한국당을 뺀)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을 가져야 한다”며 “한국당이 스스로 사법개혁의 대의를 받아들여도둑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외통위 “무관중·무중계 남북축구 유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7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를 전 평양에서 ‘무중계·무관중’ 상태로 열린 남북 축구 월드컵 예선전에 대해 한목소리로 유감을 표시했다.

다만 여야 간 유감 표명 수위는 달랐다. 여당 의원들은 “유감을 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한국 응

원단이 가지 않은 만큼 무관중 상태로 경기가 진행된 데 대해서는 이해를 표시하면서도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공포심을 느꼈던 것 같은데, 실은 그 정도였다면 우리 선수들을 보내지 말았어야 한다”고 통일부를 겨냥했다.

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김연철 통일부장관을 향해 “북한은 경기를 방해한 것”이라며 “북한축구협회에 그럴 지침을 내릴 사람은 딱 한 사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합재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 노안수술 받으면

# 돋보기 없이

##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